

목은 주민갈등 못 푸는 행정, 대책은 용역?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사업, 사실상 좌초 위기
제주시, 사업 재추진에도 주민갈등 조정 ‘용역 의존’
용역심의서도 재차 보류… “갈등 조정, 행정 스스로”

제주시가 10여 년째 멈춰있는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의 핵심인 ‘갈등 봉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갈등 조정을 놓고 외부 용역에 의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시가 제출한 ‘중앙

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갈등조정 용역’을 심의했다. 사업 목적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지하상가 상인들과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요구하는 동문·철성로 상인들 간의 갈등을 조정해 시민들의 보행권과 지하상가의 생존권을 양립시키는 것이다. 이런 갈등 조정을 통해 중앙로사거리 일대 횡단보도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원들은 ‘용역 완료 후 활용성 부족’이라는 설명과

함께 재검토 의견을 냈다. 지역주민들의 갈등 조정을 외부 인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집으면, 행정해야 할 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6월 14일 열린 제주도용역심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날 갈등조정 용역이 처음 심의됐지만, 재검토 의결됐다. 자문단 운영을 통해 행정직접 수행하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제주시가 갈등조정제에 대한 수행 능력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며 ‘책임행정 실패’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제주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은 2007년 6월 ‘중앙로사거리 교통시설심의(안)’이 교통시설심의회에서 가결되며 본격화됐다. 하

지만 당시 지하상가 상인회가 반대하며 설치가 무산, 찬성 입장인 철성로 상인회와의 갈등이 확산됐다. 2006년에는 중앙지하상가 개·보수로 임시 횡단보도가 만들어졌지만 준공 직후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996명이 보행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주민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은 채 대책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통해 오랜 갈등 문제를 풀어보려는 것”이라며 “보안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용역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초지를 무단 전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초지에 농작물 재배… 불법 전용 여전

제주시, 127.7ha 적발·처분
월동작물 파종시기 추가조사

제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한달 간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시기가 월동작물 파종시기(8-9월)와 달라 초지 내에 월동작물 재배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초지관리실태조사시 적발된 불법 전용지는 177필지·127.7ha로 행위자를 파악해 확인서 징구 및 고발할 계획이다. 콩·더덕 등 농작물 불법 전용지는 105필지·66.6ha로 월동작물 불법전용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 조사에서는 기존 초지관리실태조사시 조사됐던 초지 중

하급초지(방치돼 미이용 중인 초지) 및 농작물 재배가 의심된 초지를 중점으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읍면 담당공무원 협조를 받아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지법 개정안이 통과 시에 불법 전용자에 대해 원상복구와 더불어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행정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초지에서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7월 기준으로 제주시 초지 면적은 8758.9ha로 도내 초지의 55.2%(1만5873.7ha)를 차지하고 있다. 고대로그기자

‘위탁·운영’ 추진에 목소리 낸 의료원 “의사·직원 동요… 시민 피해 우려도”

서귀포의료원장, 기자실 찾아
의료진 확보난 가중 등 호소

의료서비스 신뢰 회복 절실

서귀포시가 시민들로 구성된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위탁·운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병원 위탁·운영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서귀포의료원은 이 같은 움직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은 10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을 찾아 “8월부터(서귀포의료원의) 위탁·운영 문제가 불거진 뒤 의료원이 흔들리고 있다”며 “의료원에 오기로 했던 신장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최근 마

음을 바꾸는 등 의사들과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7월까지 의료원 진료수익이 전년 대비 월평균 5억 7000만원 증가했는데 위탁·운영 사안이 불거진 8월에는 1억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서귀포의료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국내 위탁운영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마산의료원의 경산대병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창원군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며 창원경산대병원과 마산 삼성병원 등 대형병원이 두 곳 있어 마산의료원은 서귀포의료원처럼 큰 응급실도 필요없고,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을 거의 하지 않고 심혈관센터도 없다”며 “그래서 수익이 나는 진료과 위주로 선택



김상길(맨 왼쪽) 서귀포의료원장이 10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을 찾아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위탁·운영과 관련해 의료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태윤기자

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귀포의료원이 마산의료원처럼 적자가 많이 나는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도내에서 유일하게 연중 24시간 응급치료가 가능한 고압산소치료센터 등을 포기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던 환자 가운데 치료를 위해 제주시권 병원으로 전원한 환자가 한달 평균 91명에 이르고, 올 들어서도 7월까지 월 77명이 전원하는 등 시민들의 의료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낮은 상황이다. 이태윤기자

침수 잦은 ‘한천지구’ 정비 탄력받나

강창일 “정부 예산안 반영”

한천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0일 행정안전부가 한천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정부 예산안 7억 5000만원 배정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한천 지구는 2016년 태풍 ‘차바’로 차량 70대가 쓸려나가는

등 태풍과 집중 호우로 상습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사업은 총 사업비가 300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5:5 배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2020년에는 국비와 지방비 총합 15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0년 기본 및 설

시설계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실시설계완료와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와 제주시를 비롯해 한천 주변 주민과 도민들이 합심해 이뤄낸 결과다. 향후 도민들이 항구적으로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점검과 차기 예산 확보를 위해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감귤박람회 봉사자 등 모집

한림 비양도에 ‘안심 가로등’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양병식)는 오는 30일까지 박람회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일 40명씩 총 200명이며, 이들에겐 봉사활동 인증서와 1일 2만원 실비 보상, 가족 등 1일 5명 이내 무료 관람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도와 조직위는 30일까지 문화경연대회 참가팀도 모집한다. 참가대상자는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 연주, 연극, 합창 등 동아리 부문으로 경연시간은 팀당 10분, 팀별 15명 내외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한편 박람회는 오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이소진기자

제주시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후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19년 안심가로등 지원사업’에서 최종 선정돼 한림읍 비양도 일원에 3억원 규모의 태양광 LED가로등 설치를 지원받는다 고 10일 밝혔다.

이는 방법 취약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확립을 목적으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가로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65세 이상 인구(30%)와 현직 해녀 비율(22%)이 높아 사고 위험이 많은 비양도를 사업후보지로 신청했으며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대로그기자

“공항 지엄 공군기지 헌뎌마씀”



정경두 공참총장 “제주 제2공항에 공군부대 설치할 것”

공군기지 확인됐다! 민주당,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 백지화 요구하라!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상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포함!(사업비 2,951억원)

2020년 선행연구비 1억5천만원 반영 -> 사실상 공군기지 건설 용역비!!

제2공항 부지면적 150만평(현 공항 100만평)인데 정작 항공 수요는 국내선 50%만 전담 -> 적자공항 전략 -> 공군기지 활용 ->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도 전역 군사기지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